

연구논문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 창 원**
조 문 석***

- I. 서론
- II. 정부조직 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가치와 태도가 정부조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책 순응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50개국을 대상으로 임의절편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성과, 정치적이념, 사회·문화적 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보수적인 이념 성향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가치추구도 정부신뢰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설계, 참여의 확산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정부신뢰,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적 가치]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제1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hang717@hansung.ac.kr)

***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조교수(lucianocho@hansung.ac.kr)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이 지닌 공공가치의 특성, 정치·경제적 성향, 그리고 인권, 환경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나 태도 혹은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취해야 한다는 이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예측과 관련되어 있다. ‘신뢰’는 사회구성원 간의 암묵적으로 형성된 계약의 하나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한다(Durkheim, 1973; Weber, 1968; 서문기, 2001). 또한 신뢰는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자유로운 개인 간 정치·경제·사회적 삶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Dahrendorf, 1995; 서문기, 2001: 123).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인 국민과 정부 간의 무의식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뢰받는 정부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거시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이승중, 2010; 이상신, 2010). 또한 정부신뢰는 정부가 지닌 재량적 권한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성 요구 사이에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Cooper et al., 2008; 이승중, 2010: 103).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신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에 대한 본질적 통제 주체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의 개념이 기대, 믿음, 예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순응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 낮은 수준의 신뢰는 정책 저항과 정부 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정부의 정책이더라도 정부가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구성원의 믿음과 정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측이 부정적일 경우, 낮은 순응이나 저항으로 이어져 정책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Gamson, 1968; 김병규·이곤수, 2009; 이숙중, 2006).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신뢰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같이 지속되는 성향을 지니고(Carmines and Stimson, 1989), 특정 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책 영

역별 개인의 선호와 관심도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분배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Hetherington and Husser, 2012).

이처럼 정부 신뢰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다. 지난 OECD(2015)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 신뢰 수준은 3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OECD, 2015). 지금까지 정부 신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존의 연구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거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정부신뢰인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신뢰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성과 간의 교환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회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부성과,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II. 정부조직 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교환관계와 상벌체계

교환관계에 입각한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신뢰가 형성된다고 본다. 즉, 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일종으로, 정부 정책의 결과와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Easton(1965)이 제시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는 가장 빈도 높게 통용되는 신뢰에 대한 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정부 활동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나 실업률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and Listhaug, 1999). 어떤 사회적 행위자는 다른 사회적 행위자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기대를 갖고 있다. 즉, 특

정한 행동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을 갖는다는 것이다(Gambeta, 1998; 김대욱·이승죽, 2008: 44-45). 이처럼 정부신뢰는 상호 독립적인 행위자 간에 형성되어 있는 정부 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라 형성되며, 특정한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근거하여 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지지와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한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러한 교환관계에 입각하여 기대와 성과 간의 일치 수준을 기준으로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숙중(2006)은 “정부가 공익에 기반을 둔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면서, 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정부 신뢰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Hetherington(1998)은 “정부 산출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실제 정부의 산출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문기(2001), 손호중·채원호(2005)는 기대와 평가 간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국민들의 태도나 지지를 정부 신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신뢰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신뢰의 개념을 의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주체 간의 상호 작용으로 바라본다. 정부 신뢰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성과 간의 상호 교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국민들은 정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로, 과거 혹은 현재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부가 자신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률적인 믿음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정부를 믿을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부에 대한 개개인의 특별한 지지가 보편화 되어 정부에 대한 기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과가 낮더라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보다 높을 경우 신뢰는 향상되지만, 정부의 성과가 높더라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Levi and Stoker, 2000).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가 저하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주가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숙중,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는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Nye et al., 1997).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Hetherington and Nugent, 2001; 최지민·김순은, 2014: 32), 정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reward-punishment) 장치가 작동한 결과(Lewis-Beck and Stegmaier, 2000: 183)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은 정부 신뢰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Hetherington, 1998; Citrin and Luks, 1998). 국민들은 국가경제 상황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식하는데, 불황일 경우 신뢰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Citrin and Green, 1986; Feldman, 1983). 예를 들어, Citrin과 Green(1986)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재무 상태와 국가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을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상준(2004), 최준영(2014)은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경제성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클린턴 대통령 임기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와 행정수반에 대한 지지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Easton, 1965: 273). 그러나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후보가 선출될 경우 리더와 정부에 대한 지지를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는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mson, 1968).

반면, 경제적 성과와 정부 신뢰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 예를 들어, Nye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높던 시기에도 미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성과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정부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최지민·김순은, 2014: 30). 오히려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반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거나 판단의 특성 따라 경제변동과 정부신뢰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Chanley et al., 2000).

정부 신뢰에 대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존의 일부 연구 결과는 경제적 성과가 부분적으로 정부신뢰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다른 정책영역의 성과, 개개인의 가치체계, 정치적 신념 등에 의해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정부의 모든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잘 수행한 정책'보다는 눈에 띄는 '잘못 한 정책'에 더 많은 주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잘 한 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무시되는 반면 잘못 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Huesby, 2000; Van Ryzin 외, 2004).

둘째, 범죄나 빈곤문제와 같은 정부의 사회정책 영역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성과도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Nye et al., 1997). 정부의 자원 배분을 통해 제공되는 공

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신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ouchaert and Van de Walle, 2003). 가용 가능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빈곤 문제의 해결이나 범죄 발생율의 감소와 같은 넓은 의미의 성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들이 제공 받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Bouchaert and Van de Walle, 2003). 정치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지만,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받기도 하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원화된 오늘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좋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Gamson, 1968; Levi, 1998; Bouchaert, 1998). Christensen과 Lægreid(2005)의 연구는 보건서비스, 고용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험이 의회, 내각, 공공서비스,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정치 및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Citrin and Green, 1986; Heterington, 1998; Feldman, 1983; Chanley et al., 2000). 특히, 정치적 스캔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Chanley et al., 2000; Anderson and Tverdova, 2003; Van de Walle et al., 2008). 정치적 스캔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언론매체가 정부 혹은 대통령과 같은 임명직 관료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들춰내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된다(Orren, 1997; Van de Walle et al., 2008). 파급효과가 큰 정치적 스캔들이나 부패 사건은 낙스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례와 같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르윈스키 스캔들의 사례는 일시적인 지지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최준영, 2014; Garment, 1991; Orren, 1997). 즉, 경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정치적 스캔들과 같이 국민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일수도 혹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신념

교환관계와 상벌체계에 입각한 접근 방법은 정부-국민 간 외재적 관계와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선호와 신념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당 지지와 같은 정치적 신념체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보완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9; Yamagishi et al., 1998).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평가와 신뢰 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Van de Walle et al., 2008), 특히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부 관료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Hall, 2002; Haque, 1998; Goodsell, 2000).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성과와 실제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최지민·김순은, 2014: 31-32). 즉, 정부 성과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 황창호 외, 2015).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이 지닌 정치적 신념 체계이다. 예를 들어, Hetherington과 Husser(2012)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는 정치적 신념은 다양한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 Jacoby, 2000; Hukfeldt et al., 1999). 예를 들어, 특정 정책 영역에 대한 정부 지출이 체계적으로 설계되더라도,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적극적인 정부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Jacoby, 2000). 또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Rudolph and Evans, 2005).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제한된 역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한다(Rudolph and Evans, 2005: 662).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보수주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는 자신의 신념을 희생하고 이념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Hetherington, 2004).

이념적 성향에 따른 신뢰의 형성 과정은 정책 이슈를 둘러싼 상황 변화와 정책 자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Hetherington과 Husser(2012)는 정당지지 수

준에 따라 국방, 외교, 사회복지 정책 이슈에 대한 지지 방식의 차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은 언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정부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특정 정당지지 여부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별화된다. 또한 정당지지는 정책 이슈의 특성 및 정치신뢰와 연계하여 특정 정책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Hetherington and Husser, 2012).

3. 사회·문화적 가치와 태도

어떤 행위 주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믿음 그리고 기대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신뢰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믿음-기대-평가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환관계에서처럼 사회 구성원은 단순히 정부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신뢰 수준을 결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가치체계가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체계에 내재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요소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태도와 상호작용한다. Nye 등(1997)에 의하면 정부신뢰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김병규·이곤수, 2013).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개별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혹은 무의식적인 평가와 지지에 의해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는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신념체계 외에도,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개인의 가치체계 소득수준, 사회계층,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부 외에 다른 사회적 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개인 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다면 사회 구성원은 이를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및 가치체계에 부응하여 정책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이 향상된다(예, 박희봉·이영란, 2012). 정광호 등(2011)의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의 제도 혹은 특정한 정부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객관적인 성과로부터 비롯되기보다 개개인의 국민들이 지닌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내부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고정관념도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Stipak(197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만연되어 있을 경우 정부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부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Norris, 1999).

정부신뢰는 사회신뢰와 독립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개별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있다. 사회자본론에 의하면, 사회적 인간관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Brehm and Rahn, 1997).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사회자본을 연구한 Putnam(1993)은 대인신뢰가 공동체 내부의 규범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지만(Newton, 1999), 신뢰를 통한 대인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정책 참여 수준이 증진되면 정부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희봉 외, 2003; 김병규·이곤수, 2013: 546).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도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glehart, 1997). 과거에는 경제적 삶의 질이나 물리적인 안전에 국한되었던 개인의 관심사가 환경문제, 평화, 인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위계적 권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이숙중, 2006). 이러한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정치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반면, 서명운동, 시위와 같은 대안적인 정치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나타낸다(Inglehart, 1997; 이숙중, 2006). 이들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비판적인 시민(critical citizen)'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지 않는 정부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Inglehart, 2008). 따라서 환경,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위계적 정부의 활동,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성장 중심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공공가치와 태도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6차 웨이브(2010-2014) 자료를 이용하였다. 정부신뢰와 관련한 연구는 개인의 인식, 가치, 태도 등을 조사해야 하며,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 경우가 많다. 정부신뢰와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중 일부는 미국의 National Election Survey와 같은 선거자료나 여론조사자료(예. Felman and Zeller, 1992;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and Husser, 2011)를 이용한다. 그러나 선거조사자료와 여론조사자료는 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세계가치관조사는 정부 각 부문에 대한 신뢰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Newton과 Norris (2000)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7개 국가의 공공·민간 부문의 신뢰 수준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Inglehart(1997)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한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의 변화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세계가치관조사 6차 웨이브 자료는 가장 많은 국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결측값이 있는 관측 자료를 제외하고 6차 웨이브에 포함된 50개국 49,364명의 가치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중 우리나라 응답자 1,069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별도로 활용하여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인식,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체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본 연구는 세계 가치관 조사 6차 웨이브 자료 중 의회에 대한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행정부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개념 정의의 다양성만큼, 측정 방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신뢰를 측정 방법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의 중 하나는 신뢰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정부신뢰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로 볼 것인지, 행정부 혹은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행정 수반에 국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김대욱·이승종(2008), Chanley 등(2000), 박희봉 등(2003)의 연구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정치제도로서의 정부체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책결정자에 대한 신뢰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김병규와 이곤수(2013)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기관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신뢰 수준을 지수화하여 분석할 경우 개별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의 차이를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지지수준을 평가하기보다 정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입법·행정·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으로 정의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을 포함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한 응답 척도를 '매우 신뢰함(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석 및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각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종합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0.83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정부신뢰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정부신뢰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국가별 정부신뢰 평균 및 표준편차

국가	N	의회신뢰		행정부 신뢰		사법부 신뢰		공공서비스 신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나	1,537	2.57	0.87	2.69	0.93	2.69	0.96	2.82	0.80
나이지리아	1,702	2.27	0.91	2.22	0.91	2.44	0.87	2.67	0.85
남아프리카	2,287	2.44	0.95	2.49	0.96	2.58	0.94	2.43	0.93
네덜란드	883	2.29	0.69	2.27	0.71	2.75	0.72	2.29	0.64
대만	974	2.08	0.77	2.39	0.81	2.46	0.76	2.60	0.70
대한민국	1,069	2.08	0.73	2.43	0.76	2.72	0.71	2.44	0.71
독일	1,358	2.36	0.73	2.38	0.75	2.81	0.76	2.54	0.68
러시아	963	2.08	0.85	2.31	0.86	2.18	0.88	2.37	0.84
레바논	551	2.17	0.97	2.09	1.00	2.37	0.97	2.31	0.97

루마니아	823	1.79	0.84	1.87	0.85	2.18	0.90	2.00	0.84
르완다	1,523	2.74	0.77	2.78	0.81	2.69	0.78	2.71	0.77
리비아	995	1.72	0.95	2.06	1.09	2.75	1.08	2.41	1.03
말레이시아	1,285	2.76	0.75	2.89	0.76	3.02	0.76	2.90	0.70
멕시코	1,786	1.92	0.85	2.24	0.95	2.07	0.93	1.83	0.83
모로코	185	2.01	0.95	2.28	1.01	2.41	1.03	2.26	0.81
미국	1,887	1.99	0.66	2.21	0.72	2.59	0.73	2.46	0.67
브라질	940	1.73	0.83	2.15	0.92	2.38	0.97	2.38	0.88
사이프러스	731	2.42	0.95	2.40	1.03	2.94	0.84	2.53	0.89
스웨덴	647	2.70	0.71	2.71	0.76	3.00	0.71	2.63	0.65
스페인	748	2.26	0.77	1.96	0.77	2.34	0.80	2.24	0.79
슬로베니아	516	1.69	0.61	1.70	0.63	2.11	0.74	1.84	0.64
아르메니아	514	2.01	0.83	2.21	0.87	2.03	0.86	2.22	0.91
아르헨티나	637	2.07	0.81	2.14	0.91	1.88	0.78	1.87	0.71
아제르바이잔	965	2.77	1.07	3.18	0.95	2.63	1.02	2.72	0.93
알제리	321	2.12	0.96	2.36	0.97	2.47	0.93	2.34	0.96
에스토니아	1,023	2.29	0.79	2.50	0.79	2.75	0.80	2.76	0.61
에콰도르	1,121	2.08	0.90	2.53	1.00	2.14	0.90	1.91	0.85
예멘	183	1.73	0.72	2.33	1.06	2.20	0.86	1.99	0.74
우루과이	584	2.29	0.86	2.70	0.91	2.47	0.90	1.97	0.89
우크라이나	1,364	1.87	0.77	1.92	0.81	1.97	0.82	2.33	0.81
이라크	777	1.95	0.89	2.40	0.95	2.74	0.87	2.06	0.86
이집트	1,330	1.97	0.90	2.31	0.98	2.60	1.04	2.05	0.93
인도	1,396	2.74	0.98	2.66	0.98	2.96	0.93	2.93	0.92
일본	866	2.10	0.68	2.15	0.68	2.99	0.64	2.32	0.67
짐바브웨	1,480	2.40	0.87	2.46	0.91	2.63	0.88	2.55	0.84
칠레	560	2.06	0.80	2.18	0.88	2.12	0.77	2.20	0.79
카자흐스탄	1,451	2.77	0.88	2.95	0.83	2.47	0.89	2.80	0.80
콜롬비아	1,136	1.83	0.85	2.30	0.94	2.18	0.95	1.92	0.83
키르기즈스탄	1,350	2.53	0.87	2.58	0.89	2.45	0.91	2.65	0.86
태국	979	2.43	0.88	2.57	0.96	3.07	0.93	2.66	0.94
터키	601	2.53	0.94	2.62	1.00	2.84	0.94	2.64	0.87
튀니지	547	1.44	0.64	1.83	0.90	2.53	1.00	2.09	0.87
트리니다드토바고	432	2.16	0.76	2.31	0.84	2.22	0.81	2.34	0.78
파키스탄	1,070	1.98	0.88	2.17	0.92	2.39	0.96	2.23	0.91
팔레스타인	603	2.17	0.84	2.31	0.95	2.51	0.87	2.31	0.81
페루	854	1.64	0.76	1.91	0.84	1.79	0.85	1.70	0.80
폴란드	521	1.92	0.64	1.94	0.66	2.35	0.72	2.09	0.66
필리핀	1,170	2.63	0.80	2.62	0.80	2.81	0.84	2.76	0.77
호주	1,253	2.22	0.76	2.17	0.77	2.71	0.78	2.43	0.68
홍콩	886	2.44	0.77	2.66	0.85	3.22	0.73	2.66	0.70

3. 독립변수

1) 정부의 책임과 성과에 대한 인식

본 연구는 정부의 책임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 신뢰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Easton(1967) 등이 제시한 정치체계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의 산출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정부 정책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거나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여겨 정부 신뢰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Citrin and Green, 1986; Feldman, 1983).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경제상황과 같은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trin and Green, 1986: 439). 세계가치관 조사는 정부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은 없으나, 조사 문항 중에는 향후 실직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망을 묻는 문항, 정부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녀야 하는지, 운보다는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과 같이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Chanley 등(2000)에 의하면,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하는지도 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 조사문항 중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측정된 '실업에 대한 우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1점)부터 성공은 운에 달린 것이다(10점)로 측정된 노력에 따른 성공 가능성을 역코딩하여 개인의 경제적 전망과 공정한 사회체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녀야 하는지(10점) 혹은 개인이 책임을 지녀야 하는지(1점) 여부는 응답자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2)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념

본 연구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개개인의 정치적 이념·신념 체계가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개개인의 신념 체계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유발하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acoby, 2000).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는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과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념 수준은 1점(진보)부터 10점(보수) 사이의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관심 있음(1점)부터 전혀 관심 없음(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이념 수준에 대한 세계가치관조사의 자료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지지하는 정책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적 이념을 지닌 사람들은 국방·외교 등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 수준이 보수주의자들에 비해 높다(Rudolph and Evans, 2005).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와 같이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Hetherington, 2004). 세계가치관조사는 각 응답자들에게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으며, 경제성장, 강한국방, 국민 참여, 지역발전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항목 중 중 국가의 제1목표로 선택한 항목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계가치관 조사는 응답자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질서의 유지, 물가인상에 반대한 투쟁, 언론의 자유 보호 등을 선택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 개인목표의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정치적 가치와 이념체계를 반영하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3) 사회·문화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와 태도는 정부신뢰와 관련한 연구에서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요인이다. 이는 정부신뢰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Nye et al., 1997; 김병규·이곤수, 2013; Norris, 1999)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Putnam(1993)의 사회자본과 Inglehart(1997)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전통적인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나 이념체계에 따른 정책지지 혹은 신뢰와는 다른 유형의 정부신뢰 형성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관련한 행태인 서명운동, 평화적 시위 참여, 환경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문항과 이웃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정부신뢰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향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참여한 적 있음(1점), 앞으로 참여할 수도 있음(2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음(3점)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역코딩하여 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서명운동에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화적 시위에 대한 참여 여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이를 역코딩하였다.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전적으로 신뢰한다(1점)부터 전혀 신뢰

〈표 2〉 변수의 개념 및 측정

구분	변수	개념	측정
종속변수	종합적 신뢰	정부전체에 대한 종합적 신뢰 수준	의회, 공공서비스, 행정, 사법부 신뢰 수준에 대한 요인 점수
	의회신뢰	의회에 대한 신뢰 수준	'매우 신뢰(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 척도를 역코딩
	공공서비스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수준	'매우 신뢰(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 척도를 역코딩
	행정부 신뢰	행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매우 신뢰(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 척도를 역코딩
	사법부 신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매우 신뢰(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 척도를 역코딩
정부성과 인식	실업에 대한 우려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척도를 역코딩
	노력에 따른 성공	경제·사회 체제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인식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1점)'부터 '성공은 운에 달린 것이다(10점)' 척도를 역코딩
	정부의 책임	경제·사회적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1점)부터 정부가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10점) 척도
정치적 이념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	'매우 관심 있음(1점)'부터 '전혀 관심 없음(4점)' 척도를 역코딩
	정치적 이념	개인의 정치적 이념	'진보(1점)'부터 '보수(10점)' 척도를 역코딩
	국가목표	국가의 최우선 목표	경제성장, 강한국방, 지역발전 중 하나를 1순위로 선택할 경우 각 응답자의 해당 항목을 1로 코딩
	개인목표	개인의 최우선 목표	국가질서 유지, 물가인상 반대투쟁, 언론자유 보호 중 하나를 1순위로 선택할 경우 각 응답자의 해당 항목을 1로 코딩
사회가치	서명운동 참여	서명운동 참여 경험 혹은 참여 의사	서명운동 경험 있음(1점), 참여 의사 있음(2점), 참여의사 없음(3점) 척도를 역코딩
	평화적 시위 참여	평화적 시위 참여 경험 혹은 참여 의사	시위참여 경험 있음(1점), 의사 있음(2점), 참여의사 없음(3점) 척도를 역코딩
	이웃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	매우 신뢰함(1점)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음(4점) 척도를 역코딩
	환경보호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보다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

하지 않는다(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환경보호를 선택한 응답자를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4. 분석모형

본 연구는 각 국가별 경제·사회적 성과, 정치적 신념과 이념체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국가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이용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할 경우 사회계층, 성별 등과 같은 통제변수(터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층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에서 상위 계층인 국가별 절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임의절편모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 중 응답자가 인식하는 사회계층 수준, 종교, 실업상태 여부, 결혼 여부, 연령, 성별 등 정부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임의절편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성과, 정치적 신념, 사회문화적 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최소자승모형(OLS)으로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절편 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합적 신뢰	49,364	-0.05	0.95	-1.88	2.08
입법부신뢰	49,364	2.23	0.90	1.00	4.00
행정서비스 신뢰	49,364	2.41	0.87	1.00	4.00
행정부신뢰	49,364	2.39	0.93	1.00	4.00
사법부신뢰	49,364	2.54	0.92	1.00	4.00
실직우려	49,364	2.98	1.12	1.00	4.00
노력에따른성공	49,364	6.87	2.77	1.00	10.00
정부의 책임	49,364	6.31	2.93	1.00	10.00
정치에 대한 관심	49,364	2.64	0.86	1.00	4.00
정치적 이념	49,364	5.27	2.33	1.00	10.00
국가목표(경제성장)	49,364	0.61	0.49	0.00	1.00

국가목표(강한국방)	49,364	0.14	0.34	0.00	1.00
국가목표(지역발전)	49,364	0.07	0.25	0.00	1.00
개인목표(국가질서)	49,364	0.42	0.49	0.00	1.00
개인목표(물가억제)	49,364	0.26	0.44	0.00	1.00
개인목표(언론자유)	49,364	0.10	0.30	0.00	1.00
서명운동	49,364	1.71	0.79	1.00	3.00
시위참여	49,364	1.62	0.71	1.00	3.00
이웃신뢰	49,364	2.83	0.82	1.00	4.00
환경보호	49,364	0.49	0.50	0.00	1.00
사회계층(매우높음=1)	49,364	0.02	0.15	0.00	1.00
사회계층(높음=1)	49,364	0.22	0.41	0.00	1.00
사회계층(보통=1)	49,364	0.36	0.48	0.00	1.00
사회계층(낮음=1)	49,364	0.27	0.45	0.00	1.00
(로그)연령	49,364	3.64	0.40	2.77	4.60
성별(남성=1)	49,364	0.50	0.50	0.00	1.00
종교	49,364	0.65	0.48	0.00	1.00
실업상태(=1)	49,364	0.10	0.29	0.00	1.00
혼인상태(기혼=1)	49,364	0.54	0.50	0.00	1.00

IV. 분석결과

아래의 <표4>와 <표5>는 각각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50개국 응답자 49,364명에 대한 임의절편모형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응답자 1,069명에 대한 최소자승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실직을 우려하는 수준이 증가할수록 입법, 행정, 사법,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 신뢰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에 대한 우려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노력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예. Bouchaert and Van de Walle, 2003; Hetherington, 1998; Citrin and Lukes, 1998). 한편, 우리나라를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최소자승모형 결과에서는(모형6-모형10), 실업에 대한 우려가 입법, 행정, 사법,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력에 따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절편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실업에 대한 우려와 정부신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만 있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실업을 우려하는 응답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50개국 응답자 중 실업을 매우 우려하거나 혹은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68.62%인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의 경우 실업을 우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2.04%로 50개국 응답자 평균보다 19.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개인보다 정부가 경제·사회적 성과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종합적 신뢰, 입법·행정·사법부, 행정서비스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사법부 신뢰(모형9)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분석 결과(Random Intercept Models)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종합적신뢰	입법부신뢰	행정부신뢰	사법부신뢰	행정서비스신뢰
정부성과 인식	실업우려	-0.007+	-0.009*	-0.012**	-0.004	0.003
		(0.004)	(0.004)	(0.004)	(0.004)	(0.004)
	노력에 따른 성공	0.012***	0.006***	0.008***	0.014***	0.009***
		(0.001)	(0.001)	(0.001)	(0.001)	(0.001)
	정부의책임	-0.007***	-0.008***	-0.007***	-0.004**	-0.004**
		(0.001)	(0.001)	(0.001)	(0.001)	(0.001)
정치이념	진보적 정치이념	-0.023***	-0.017***	-0.022***	-0.015***	-0.014***
		(0.002)	(0.002)	(0.002)	(0.002)	(0.002)
	정치에 대한 관심	0.248***	0.205***	0.225***	0.172***	0.147***
		(0.005)	(0.005)	(0.005)	(0.005)	(0.005)
	국가목표(경제성장=1)	0.017+	0.012	0.022*	0.019+	-0.000
		(0.010)	(0.010)	(0.010)	(0.010)	(0.010)
	국가목표(강한국방=1)	0.050***	0.044**	0.064***	0.030*	0.012
		(0.014)	(0.013)	(0.014)	(0.014)	(0.013)
	국가목표(지역발전=1)	0.010	-0.002	0.016	0.000	0.017

		(0.017)	(0.017)	(0.017)	(0.017)	(0.016)
	개인목표(국가질서=1)	0.054***	0.026*	0.052***	0.055***	0.032**
		(0.011)	(0.010)	(0.011)	(0.011)	(0.010)
	개인목표(물가억제=1)	0.057***	0.025*	0.045***	0.066***	0.038***
		(0.011)	(0.011)	(0.011)	(0.011)	(0.011)
	개인목표(언론자유=1)	-0.003	0.004	-0.004	0.003	-0.012
(0.015)		(0.014)	(0.015)	(0.015)	(0.014)	
사회가치	서명운동	0.016**	0.013*	0.002	0.027***	0.008
		(0.006)	(0.006)	(0.006)	(0.006)	(0.006)
	시위참여	0.028***	0.017**	0.009	0.020**	0.038***
		(0.006)	(0.006)	(0.006)	(0.006)	(0.006)
	이웃신뢰	0.163***	0.118***	0.129***	0.125***	0.122***
		(0.005)	(0.005)	(0.005)	(0.005)	(0.005)
환경보호	0.040***	0.038***	0.028***	0.019*	0.036***	
	(0.008)	(0.008)	(0.008)	(0.008)	(0.007)	
통제변수	사회계층(매우높음=1)	0.146***	0.111***	0.132***	0.103***	0.095***
		(0.028)	(0.027)	(0.028)	(0.028)	(0.026)
	사회계층(높음=1)	0.116***	0.065***	0.071***	0.135***	0.083***
		(0.015)	(0.014)	(0.015)	(0.015)	(0.014)
	사회계층(보통=1)	0.074***	0.038**	0.043**	0.079***	0.066***
		(0.013)	(0.013)	(0.013)	(0.013)	(0.013)
	사회계층(낮음=1)	0.032*	0.003	0.027*	0.048***	0.023+
		(0.014)	(0.013)	(0.014)	(0.014)	(0.013)
	(로그)연령	-0.005	0.003	0.034**	-0.067***	0.010
		(0.011)	(0.011)	(0.011)	(0.011)	(0.011)
	성별(남성=1)	-0.027***	-0.008	-0.037***	-0.027***	-0.011
		(0.008)	(0.007)	(0.008)	(0.008)	(0.007)
	종교	0.073***	0.072***	0.043***	0.064***	0.043***
		(0.009)	(0.009)	(0.009)	(0.009)	(0.009)
실업상태(=1)	-0.008	-0.010	0.007	-0.007	-0.015	
	(0.014)	(0.013)	(0.014)	(0.014)	(0.013)	
혼인상태(기혼=1)	0.014+	0.004	0.013	0.008	0.018*	
	(0.008)	(0.008)	(0.008)	(0.008)	(0.008)	
상수		-1.336***	1.258***	1.270***	1.726***	1.431***
		(0.068)	(0.064)	(0.064)	(0.067)	(0.063)
Sigma u		-1.157***	-1.248***	-1.333***	-1.219***	-1.281***
		(0.101)	(0.101)	(0.101)	(0.101)	(0.101)
Sigma e		-0.179***	-0.213***	-0.168***	-0.169***	-0.229***
		(0.003)	(0.003)	(0.003)	(0.003)	(0.003)
Observations		49,364	49,364	49,364	49,364	49,364
Number of groups		50	50	50	50	50
Log-likelihood		-61,329	-59,629	-61,856	-61,798	-58,842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정치적 이념과 신념체계는 응답자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신뢰 수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서비스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횡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신뢰 수준이 향상된다고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의 저하, 즉 정부의 활동을 불신할수록 정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다. 정치적 스캔들이나 부패 사건, 혹은 언론 등에 의해 특정 정책적 이슈가 부각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관심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Orrén, 1997; Garment, 1991), 특정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활동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확산은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는 최근의 정책적 방향성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는 다양한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합 지향적인 일원화된 정책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적 이념과 가치체계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절편 모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자승모형에서도 임의절편모형과 같이 진보적 정치성향과 정부신뢰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정치·경제적인 이념 성향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사회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보수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반면,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김병규·이근수, 2009). 국가의 1차적인 목표가 경제 성장, 강한 국방력과 같이 보수적인 정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응답자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특히 행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와 같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을 경우 정부신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가치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물가 억제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국가질서 유지와 같은 개인의 목표를 1순위라고 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정부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언론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강한 국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법부 신뢰 수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경제 성장은 행정부 신뢰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서비스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개인 목표가 물가 억제와 국가질서 유지인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하여 행정서비스 신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분석 결과(대한민국 응답자 대상 OLS 모형)

변수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모형10
		종합적신뢰	입법부신뢰	행정부신뢰	사법부신뢰	행정서비스신뢰
정부성과 인식	실업우려	-0.013	-0.016	-0.022	-0.014	0.013
		[0.027]	[0.027]	[0.027]	[0.027]	[0.026]
	노력에 따른 성공	0.048***	0.033***	0.033***	0.050***	0.029***
		[0.009]	[0.009]	[0.009]	[0.009]	[0.009]
	정부의 책임	-0.014	-0.015	-0.005	-0.024*	0.003
		[0.011]	[0.011]	[0.010]	[0.010]	[0.010]
정치이념	정치적 이념	-0.019+	-0.014	-0.009	-0.023*	-0.011
		[0.011]	[0.011]	[0.011]	[0.011]	[0.011]
	정치에 대한 관심	0.283***	0.223***	0.180***	0.244***	0.209***
		[0.042]	[0.041]	[0.041]	[0.041]	[0.040]
	국가목표(경제성장=1)	0.097+	0.094+	-0.014	0.126*	0.089+
		[0.051]	[0.050]	[0.049]	[0.050]	[0.049]
	국가목표(강한국방=1)	0.109	0.129	-0.096	0.237**	0.059
		[0.086]	[0.085]	[0.084]	[0.084]	[0.083]
	국가목표(지역발전=1)	0.000	-0.006	-0.109	0.072	0.048
		[0.072]	[0.071]	[0.071]	[0.071]	[0.070]
	개인목표(국가질서=1)	0.083	0.002	0.025	0.077	0.155*
		[0.069]	[0.068]	[0.067]	[0.068]	[0.067]
	개인목표(물가억제=1)	0.046	0.007	-0.028	0.053	0.115+
		[0.068]	[0.067]	[0.066]	[0.067]	[0.066]
	개인목표(언론자유=1)	-0.098	-0.089	-0.123	-0.087	0.010
		[0.093]	[0.092]	[0.091]	[0.091]	[0.090]
사회가치	서명운동	0.040	-0.032	0.039	0.050	0.068+
		[0.036]	[0.036]	[0.035]	[0.035]	[0.035]
	시위참여	-0.027	0.040	-0.017	-0.060	-0.048
		[0.045]	[0.044]	[0.044]	[0.044]	[0.043]
	이웃신뢰	0.202***	0.162***	0.142***	0.183***	0.123***
		[0.036]	[0.035]	[0.035]	[0.035]	[0.034]
	환경보호	0.015	0.037	0.008	-0.003	0.002
		[0.045]	[0.044]	[0.044]	[0.044]	[0.043]
통제변수	사회계층(매우높음=1)	-0.252	-0.108	-0.426+	-0.147	-0.075

		[0.260]	[0.258]	[0.254]	[0.256]	[0.252]
사회계층(높음=1)		0.035	0.065	-0.057	0.088	0.008
		[0.113]	[0.112]	[0.111]	[0.111]	[0.110]
사회계층(보통=1)		0.007	0.043	-0.028	0.041	-0.038
		[0.110]	[0.109]	[0.107]	[0.108]	[0.106]
사회계층(낮음=1)		-0.084	-0.039	-0.061	-0.016	-0.144
		[0.118]	[0.117]	[0.115]	[0.116]	[0.114]
(로그)연령		0.181*	0.102	0.177*	0.137+	0.133+
		[0.077]	[0.076]	[0.075]	[0.076]	[0.074]
성별(남성=1)		-0.102*	-0.054	-0.014	-0.125**	-0.120**
		[0.045]	[0.044]	[0.043]	[0.044]	[0.043]
종교		0.017	0.025	-0.010	0.087+	-0.058
		[0.048]	[0.047]	[0.046]	[0.047]	[0.046]
실업상태(=1)		0.050	-0.040	0.076	0.162	-0.050
		[0.117]	[0.116]	[0.114]	[0.115]	[0.113]
혼인상태(기혼=1)		-0.097+	-0.052	-0.038	-0.046	-0.164**
		[0.055]	[0.055]	[0.054]	[0.054]	[0.053]
상수		-2.111***	0.612+	0.907*	0.674+	1.148**
		[0.364]	[0.360]	[0.356]	[0.358]	[0.352]
Observations		1,069	1,069	1,069	1,069	1,069
R-Square		0.181	0.114	0.192	0.105	0.094
F		9.585	5.617	10.34	5.108	4.497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절편모형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는 입법·사법·행정부 등과 같은 정부 부문에 대한 신뢰 향상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 의사가 높을수록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화적 시위에 대한 참여 경험이나 의사도 행정부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문의 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보다 환경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서명운동, 시위참여, 환경보호 등과 같은 변수는 정부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가치체계, 탈-물질적인 가치체계의 확산과 더불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정부 부문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 Inglehart(1997)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전통적인 위계적 정부

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저하된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나 활동이 반드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활동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Inglehart(2008)가 제시하는 비판적인 시민이 항상 정부를 불신하는 시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혹은 최소한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참여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포함된 50개국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성과, 정치이념, 사회가치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응답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행정부, 의회, 사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 저하와 저항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비용을 높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설계하기보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매몰될 가능성을 높인다(이승중, 2010).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성과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경제성장, 국방, 국가질서 유지보다 언론의 자유와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반면,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웃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의 개선에 매몰되기보다 개개인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영역과 관련하여 공공

의 질서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불만족이 확대되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노력에 따른 성공 기대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의 규칙과 질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신이 만연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참여와 신뢰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 향상을 위한 참여 제고가 확대되어야 한다. 참여를 통해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의 확산은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하여 사회적 일탈과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들의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가치 체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수렴할 경우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회복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공적 영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정치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참여 확산도 요구된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넘어 환경·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공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발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면적 설문자료를 이용한 결과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임의절편모형은 다양한 속성을 통제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변화량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횡단면적인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세 계가치관조사 자료와 같은 인식조사 자료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2차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14). 「임기 중 클린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경제와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2): 495-514.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의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병규·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4.
- 김병규·이곤수. (2013).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541-566.
- 박희봉·이영란. (2012).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4(1): 913-936.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91-146.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이상신. (2010). 「정부신뢰의 위기: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4): 97-117.
- 이숙중. (200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1(1): 143-172.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1.
- 최준영. (2014). 「스캔들, 경제적 성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미국의 경우」, 한국정당학회보, 13(3): 157-183.
- 최지민·김순은. (2014).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9-57.
-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5).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3). "Corruption, Political Allegianc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91-109.
- Bouchaert, Geert. (1998).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tworks in a Governance Context." In Francois Theron, Andries van Rooyen, and Fredreik Uys. (eds.) *Spanning the Global Divide: Networking for Sustainable Delivery*. (pp. 40-56.) Stellenbosch: School of Public Management, University of Stellenbosch.
- Bouchaert, Geert, and Steven Van de Walle. (2003).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 and Satisfaction Indicat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69(3): 329-344.
- Brehm, John, and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armines, Edward G., and James Stimson. (1989).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ley, Virginia A., Thomas J. Rudolph, and Wendy M. Rahn. (2000). "The Origin and Consequence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54: 239-259.
- Christensen, Tom, and Per Lægveid. (2005).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Citrin, Jack, and Donald Phili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431-453.
- Citrin, Jack, and Samantha Luks. (1998). "Political Trust Revisited: Déjà Vu All Over Again?" Paper presented at the 1998 Hendricks Symposium on Public Dissatisfaction with Government,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Cooper, Christopher A., Gibbs Knotts H., and Kathleen M. Brenna. (2008). "The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Case of Zon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3): 784-803.
- Dahrendorf, Ralf. (1995). "A Precarious Balance: Economic Opportunity, Civil Society, and Political Liberty." *The Responsive Community*, 5: 13-39.
- Durkheim, Emile. 1973. "Individualism and the Intellectuals." in R. Bellah. (ed.)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aston, David. (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Feldman, Stanley. (1983). "The Measurement and Meaning of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Methodology*, 9: 341-354.
- Feldman, Stanley, and John Zeller. (1992). "The Political Culture of Ambivalence: Ideological Responses to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1): 268-307.
- Gambeta, D. (199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Gamson, William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Press.
- Garment, Suzanne. (1991). *Scandal: The Crisis of Mistrust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Goodsell, Charles T. (2000). "Bureaucratic Bashing." In Jay M. Shafritz (ed.), *Defining Public Administration*. (pp. 128-131). Boulder, CO: Westview.
- Hall, Thad E. (2002). "Live Bureaucrats and Dead Public Servants: How People in Government are Discussed on the Floor of the Hou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242-251.
- Haque, M. Shamsul. (1998). "Legitimation Crisis: A Challenge for Public Service in the Next Centur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64(1): 13-26.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arc J. (2004).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arc J. and John D. Nugent. (2001).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Devolution: The Role of Political Trust." In Jonn R. Hibbing and Elizabeth Theiss-Morse.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pp. 134-15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Marc J., and Jason A. Husser.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12-325.
- Huckfeldt, Robert, Jeffrey Levine, William Morgan, and John Sprague. (1999). "Accessibility and the Political Utility of Partisan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3): 888-911.
- Huesby, B. (2000). *Government Performance and Political Support*. Trondheim, Norway: Institutt for Sosiologi og Statsvitenskap.
- Inglehart, Ronald F.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F.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31(1-2): 130-146.
- Jacoby, William G.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750-767.
- Levi, Margaret. and Laura Stoker.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57-507.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183-219.
- Levi, Margaret. (1998). *A State of Trust*. Florenc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Robert Schumann Centre.
- Miller, Arthur H., and Ola Listhaug. (1999). "Political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Trust."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pp. 204-2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pp. 169-18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and Pippa Norris.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 Pharr and R. Putnam. (eds.), *Dis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p. 52-73). Princeton: Princeton Unisversity Press.
- Norris, Pippa.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D.,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 Orren, Gary.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Joseph S.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Thomas J., and Jillian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tipak, Brian. (1979).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Potential Misuse as a Performance Indic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1): 46-52.
- Van de Walle, Steven. Steven Van Roosebroek, and Geert Bouchaert. (2008). "Trust in the Public Sector: Is there Any Evidence for a Long-Term Decline?"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4(1): 47-64.
- Van, Ryzin, G. (2004). Expectations, Performance, and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 433-488.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ister.

Yamagishi, Toshio, Karen S. Cook, and Motoki Watabe. (1998). "Uncertainty, Trust, and Commitment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1): 165-194.